■ '만년필 조작 사건' 故 김태주 할아버지 지난 1월 재심 무죄 선고 이후…

친동생 2명도 무죄… 삼남매 명예회복

'천리마' 쓰인 만년필 때문 1968년 징역형 선고받아

제주지법, 2일 재심 판결 "반공법 위반 증거 없다"

속보=무죄 판결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세상을 떠난 '만년필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故 김태주(80) 할아버지(**본보 1월 21일자 4면**)의 친동생 2명도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빠이자 형인 김 할아버지에게 '천리마'라고 써진 만년필을 받았다는 이유로 196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68년 7월 31일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 할아버지의 남동생 A(76)씨와 여동생 B(74)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사망해 그의 아들이 재심 청구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 할아버지는 28살이던 1967년 4월, 제주에서 10명을 뽑는 '농업과수 연수생'으로 선발돼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감귤 농가에서 3개월간 농업 연수를 받았다. 연수를 마친 뒤 오사카 소재 친척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다 제주로 돌아왔다.

문제는 제주에 돌아오기 전 오사카 조선소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친척에게 받은 만년필 3자루 때문에 발생했다. 만년필에 북한이 추진했던 사회운동의 명칭인 '천리마'와 지명인 '청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귀국 후 김 할아버지는 동생들에게 해당 만년필 1자루씩을 선물로 줬는데, 이것이 발단이 돼 삼남매가 경찰에 체포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김 할아버지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동생들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로 살아가야 했다.

1968년 당시 제주지방법원은 "북괴에서 제조돼 배포된 것을 알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삼남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들이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18일 김 할아버지의 재심 선고공판에서도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할 당시 친척에게 만년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만년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단체(조총련)의 지령을 받거나, 그 사정을 알고 물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조작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조업중 선원 1명 실종

서귀포시 표선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져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36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동쪽 약 5.5㎞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대형선망어선 K호(부산 선적·126t, 승선원 27명)에서 선원 정모(47)씨가 그물을 내리다 그물 줄에 맞아 바다로 떨어졌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해경은 해군 등에 수색 협조를 요청하고 인근 해상을 수색 중이다. 이태윤기자

해경, 불법조업 어선 적발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제주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통영선적 D호(79t급 근해장어통발어선, 승선원 11명) 선장 윤모(57·경남 통영)씨를 적발하고 이날 중으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호는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도 본도 5.5㎞ 내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D호는 1일부터 제주인근 조업금지구역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 이날 오전 8시40분 적발될때까지 바다장어 약 300㎏을 어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석기자

제주자연생태공원 곤충채집 체험 4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방학을 맞아 열린 '여름방학맞이 곤충 생태 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곤충채집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강희만기자

"성산포항 반입 가축퇴비 관리할 것"

본보 '성산 악취' 보도 도 "원인 원천 차단 노력"

속보=제주자치도는 '천혜 경관 품은 성산 악취 몸살'이라는 제하의 본보 기사(**8월 2일자 4면**)와 관련 성산포항 반입 가축퇴비 물량 관리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성산포항의 경우 약 4년 전부터 녹동항에서 선적해 1일 1회 150t 정도 반입되는 가축퇴비 물량을 처리해 오고 있으며, 반입 후 익일까지 수요자들에게 반출, 전량 처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태풍(호우)으로 인해 수요자인 농가로 퇴비가 반출되지 않아 성산포항에 3~4일 계속 적재되면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된 물량 중 문제 업체에서 생산되는 퇴비의 포장상태가 불량해 악취가 심하게 발생했다고 제주도는 해명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악취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더불어 문제업체와는 퇴비거래를 중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향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시에는 가축분 퇴비의 경우 악취 차단을 위해 이중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상윤기자

실종 유동현군 사인은 '익사'

해경, 유군 부검실시 "실종당일 사망 추정"

속보=실종된 후 끝내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유동현(18)군의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2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군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신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폐에 물이 차 있어 바다에서 익사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망추정 시간은 실종 당일인 지난달 29일이다.

표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할머니 심부름을 받고 집을 나간 뒤 오후 6시50분쯤 성읍2리 마을 소재 한 카페의 CCTV에 표선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 실종 나흘째인 1일 표선해수욕장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태윤기자

분양형 호텔 운영업체간 갈등 칼부림

서귀포시 소재 한 분양형 호텔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내 한 분양형 호텔에서 호텔 운영업체 대표 A(55)씨가 흉기로 투자자들이 포함된 또 다른 운영업체 직원 B(26)씨에게 상해를 가했다.

또 A씨는 당시 폭력 행위를 저지하던 C(48)씨에게도 주먹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서울제주도민회장 직무집행정지 기각

법원 "가처분 이유 없다" 도민회 "화합위해 최선"

서울제주도민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이번 법원 판단이 지난 두달 끌어온 서울도민회장과 지역회장간 불협화음을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4일 서울제주도민회내 12개 지역회장들이 신청한 '신현기 서울제주도민회장의 직무를 집행정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이유없다'며 지난 1일 기각했다.

법원은 "해임 여부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법원은 오로지 해임 의결의 효력 유무만 판단할 수 있다"며 "해임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해임 의결권을 보전하기 위해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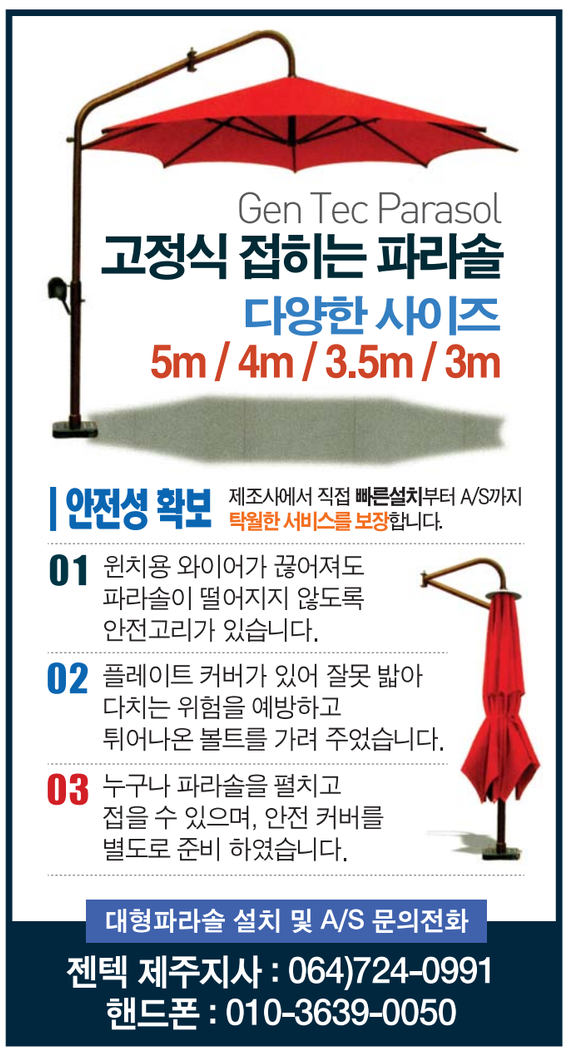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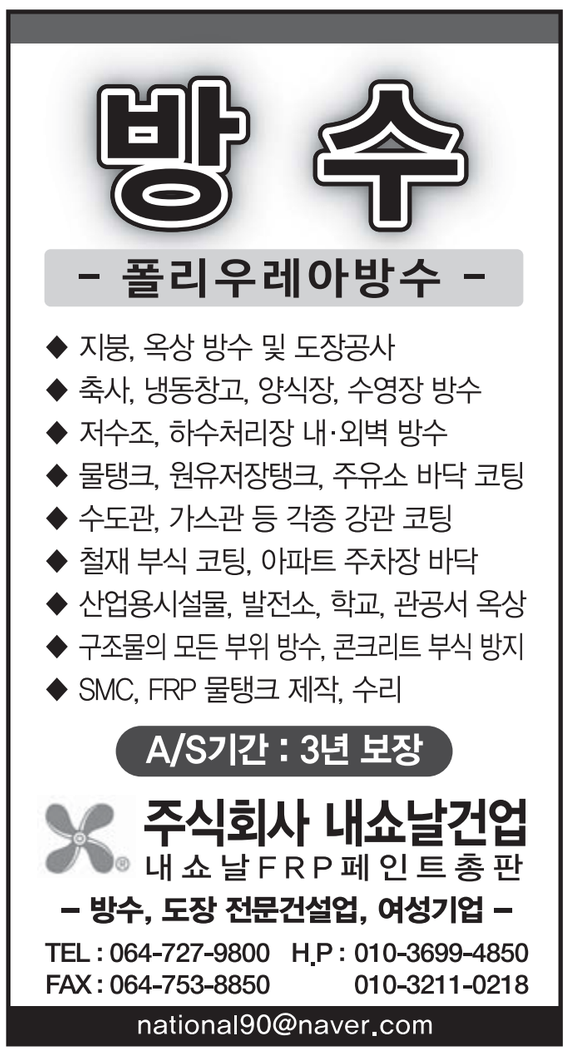
앞서 서울제주도민회내 12개 지역회장들은 신 회장이 직능직 부회장의 수와 감사를 종래 15명에서 27명으로 증원, 사실상 후임자를 본인이 지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도민회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요구한 회칙 개정안 상정도 무시하는 등 절차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제주도민회는 "회원간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4·3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 8000명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 결과 7월 말까지 8132명(희생자 33명, 유족 8099명)이 접수했으며, 이 중 6719명에 대해 발급이 완료됐다고 4일 밝혔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70대가 2375명(2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243명(15%), 50대 961명(12%) 순이었으며 10대 미만도 833명(10%)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5006명(62%), 서귀포시 1759명(22%), 도외 거주자 1366명(16%), 국외 1명이 접수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항공사 제주항공의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상윤기자